

## 【 2016.04.20(수) 강원일보 】

평창올림픽 고속철 담합 의혹

현대건설 등 4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19일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건설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투찰기격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길이 58.5km로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 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류재일기자

“도 발주 공사 임금 지급하라”

건설노조 도청앞 농성 돌입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본부장:권혁병)는 19일 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도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 체불이 해결될 때까지 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할 것을 표명했다. 정윤호기자 jyh89@

# 이전 공공기관 신축현장서 체불 발생

지역 20개 업체 “장비 임대료·자재비 3억 못 받아”

원청 “피해 최소화 방침”…연구원 측 “조속히 해결”

【원주】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대금 체불이 발생해 지역업체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원주지역 영세 중소사업자가 대부분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역업체 등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본원 건립 신축공사에서 일을 하거나 납품을 한 지역 20여 개 업체는 지난달부터 건재, 철물 등 자재 대금과 장비 임대료 등 3억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인 A사 대표이사가 지난달 종순 갑자기 숨지면서 해당업체가 대표이사 부재로 실질적인 형태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금 체불이 발생하자 지역업자 등은 19일 공사현장 입구에서 농성을 하며 발주처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원청업체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세업자들에게 수억 원은 너무나 큰 돈”이라며 “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했는데 발주처, 원청 모두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본원 건립 신축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해 지역업체와 근로자들이 19일 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다. 원청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돈은 다 줬고 미불

액 정리로 오히려 추가 돈을 부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의적 차원에서 보험 청구 등 방법으로 영세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하도급업체가 정식

부도 처리가 되지 않아 시일은 다 소 걸린다”고 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 중으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 183억원 규모 인제 통합상수도공사 동우건설 수주

183억원 규모의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주시행사가 결정됐다.

조달청은 최근 ‘인제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개찰한 결과, 경북업체인 동우건설이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이 공사는 인제군 기린면과 상남면 일원에 통합상수도시설을 확장하는

것으로,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1080일이다.

동우건설은 예정가격 대비 82%의 투찰률로 151억8143만8000원을 적어내 사실상 공사를 수주했다.

동우건설은 공동도급으로 도내 업체와 공사를 진행한다.

안은복 rio@kado.net

## 원주-강릉 고속철 담합비리 포착

### 검, 건설사 4곳 압수수색

속보=검찰이 총 사업비가 1조원에 이르는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입찰 담합 비리(본지 2015년 1월 15일자 5면) 혐의를 포착하고 건설사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 사부는 19일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의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 입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건설사들은 지난 2013년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하면서 4개 공사 구간을 서로 나눠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려 조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초에 발주한 원주-강릉 구간 철도 공사에서 4개 건설사가 입찰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원주-강릉 구간 철도 공사의 총사업비는 9376억원에 달한다.

박지은

## 【 2016.04.20(수) 건설경제 】

### 올림픽 특구 개발·아트센터 건설 추진

#### 권성동 (새누리당·강원 강릉)



권성동 당선인은 앞으로 4년간 활동 목표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로 꼽았다.

이를 기반으로 강원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공약은 △올림픽 경기장 및 접근도로, 올림픽 아트센터 건설 △올림픽특구 개발 활성화 및 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지원 등이다.

또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교통망 구축 지원과 경포도립공원 해제 추진,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에 따른

유류부지 활용 등으로 강릉을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강릉하수처리시설 악취 방지 △남대천 하수처리시설 개선 △장애인 종합문화센터 건립 △강원도립대학 실내수영장 건립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건립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활성화를 제안했다.

이른바 '지역 경제활성화'에 최적화된 공약이다.

18, 19대에 이어 20대까지 3선에 성공한 권 당선인은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경포도립공원 해제와 옥계 비철금속단지 활성화, 발전소 관련산업, 3D프린팅 등 강릉의 산업구조를 혁신시키겠다"고 말했다.

### 접경지 도로망 확충, 수도권 접근성 향상

#### 황영철 (새누리당·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



황영철 당선인은 전국 최대 '공룡 선거구'인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에서 SOC 기반사업 중심의 공약을 강조하며 18, 19대에 이어 3선 의원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른바 '힘 있는 3선 의원'으로 선출된 만큼 공약 이행은 물론 중앙정치권에 강원도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 재정 확보 및 공약 이행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철원에서는 국도 47호선 경기도 포천시 이동~장면 간 4차선 확·포장사업과 국도 87호선 인동송읍 오지리~철원읍 대마리 간 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 광역 화장장 건설, DMZ세계평화 공원 조성, 궁예왕 관련 테마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화천에서는 수도권 접근 도로망 확충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춘천과 화천을 잇는 국도 5호선 4차선 조기 확·포장 및 화천대교 확장 등을, 양구에서는 한반도 정중앙 정원 조성과 산림박물관 조성사업 등을, 인제에서는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 공동화 현상에 대비한 대책의 하나로 백담사 로프웨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천에는 홍천~춘천 내륙종단선, 국도 5호선 홍천~춘천 4차선 확·포장, 널미터널 개설, 국립산림복지단지 조성, 단양대대 주변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 '남원주역~강남' 서울 1시간 생활권 실현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



송기헌 당선인은 침체한 구도심을 회복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약 슬로건도 '중부내륙 50만 중심도시 원주'다.

주요 공약은 남원주역 운행구간을 서울 강남과 연결하는 방안부터 지하철 1호선 연장으로 서울 강북과 연결하는 등 서울까지 1시간 생활권을 조기 완성할 뿐 아니라 혁신도시 반곡역 폐선 부지를 예술·환경의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부구간(소초면~지정면~홍업면)의 조기 개통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구 원주여고 부지에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 건립 △도로 확·포장사업 조기 완성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도와 청년의무고용제도 추진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치악산 둘레길 조성 및 개발과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법천사지·거돈사지·홍법사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의 공약도 내놨다.

지난 19대 총선의 패배를 설욕한 송 당선인은 강원도 내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젊어진 상황이지만, 선거기간 내세운 공약을 지키고 실행하는 게 사명이라고 밝혔다.

송 당선인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약속한 공약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